

정치·사회적 남녀불평등에 항의해온 스위스 여성노동자들이 14일 스위스 전국 700들을 맞아 스위스노동조합연맹(SGB)의 주도 아래 여권 신장을 위한 전국적 파업을 벌였다. 세계 최초로 여성들만이 참여한 이번 파업에는 전국 각 도시에서 수만 여명이 거리로 나왔으며, 여성 인력만을 사용하는 사업장들이 상당수 조업을 중단했다.

스위스는 주변 유럽국가들에 비해 남녀차별이 극심한 예외적 국가이다. 이 예외적으로 극심한 남녀차별은 기업 안에서 여성이 간부 지위로 승진할 기회

분적으로 허용하고 몇몇 정당들이 여성간부직 의무할당제를 도입하게 유도하는가 하면, 베른 시의회는 남녀 의원직 비율을 각각 60%로 제한하는 결의를 통과시키도록 하는 자극제 역할을 했다.

이번 여성파업은 실업률 1.4%의 유리한 경제적 세력관계를 적극 활용하여 감행되었지만 파업은 거의 전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지닌 것이다.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강토를 가졌고 유일하게 고대 아테네식 직접민주주의의 전통을 간직한 나라이지만 여성의 정치적 지위

이때마다 번번이 주장된 거부이유는 1년에 한번 광장에 모여 시민들이 직접 국사를 처리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전통이 여성이 참여할 경우 불가피하게 폐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민이 모이는 광장이 좁아 여성들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여성참정권이 수십년 동안 시대착오적으로 거부돼온 스위스의 이 사례는 광장집회식 직접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이미 역사의 유물임을 보여주는 셈이다.

스위스 여성들이 스위스의 정치적 낙후상태를 타파하기 위해 꾸준히 펼쳐온 투쟁을 통해 연

스위스 여성노동자들 첫 정치파업 정국 강타

주변국 비해 극심한 남녀차별 격렬항의 기업·정당 간부직 부분허용·할당제 유도

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 여성노동자 평균임금이 남성노동자 임금보다 30% 적다는 것 등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남성노동자에 의해 지배되는 노동조합이 이례적으로 여권 신장을 위한 정치파업에 나서게 된 데는 주변국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비해 형편없는 근로조건에 대한 스위스 여성노동자의 항의가 최근 들어 격렬해졌기 때문이다.

30만~40만명의 여성들이 거리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많은 여성들이 파업일을 휴일로 즐기는 바람에 파업 당일의 시위참여자 수는 수만명에 그쳤다. 그러나 이번 파업은 스위스의 사회분위기를 뒤흔들어 일부 기업에서는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여성의 간부 승진기회를 부

는, 최근까지도 유럽·주변국들의 19세기 수준에 지나지 않는 상태에 있다.

스위스 국명이 스위스의 주요 공용어인 독일어와 프랑스어로 보기 드물기 여성명사이고, 또 한 국가수호상도 이례적으로 방패와 창을 든 헬베티아 여성상이지만 스위스여성의 투표권은 1971년에야 어렵게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투표권도 연방선거에만 국한되고 캄통(주)과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오랫동안 여성참정권이 배제되었다. 지금도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성의 피선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을 정도이다.

1990년 8개 캄통 중 가장 뒤늦게 여성투표권을 인정한 아펜첬 캄통은 그간 여러 차례 여성들의 참정권요구를 거부했다.

은 가장 큰 수확은 1981년 남녀평등조항을 헌법에 명기한 것이다. 이 헌법조항에는 정치·사회관계에서 남녀평등을 보장하는 남녀평등법을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이 법률제정이 오늘날 미루어져 2000년대로 넘어갈 것으로 보였다. 이번 여성노동자의 전국 파업은 여권신장투쟁이 직면한 침체국면을 돌파하려는 정치투쟁이다.

이에 대한 고용주쪽과 보수주의자들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남녀동등권은 남녀동등 의무를 수반하고 따라서 여성도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여성에 대한 야간작업 금지조항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등 막무가내 논리로 무성하다.

〈프랑크푸르트=황태연 통신원〉